

▣ EU의 친환경 정책, 소비자 비용 부담 현실화에 따른 우려로 정책에 대한 반발 증가

- EU의 그린딜에 따른 친환경 정책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추진에 따른 반발이 증가하고 있음.¹⁾
 -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정치권에서 우익 성향 정당들이 우세하면서 이러한 반대가 더욱 커지고 있어 친환경 정책의 진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 특히 유럽 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운송 및 난방 정책에 대한 반발이 큼.
 -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도 2050년 기후중립 목표를 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업계와 취약 가구를 돕기 위해 일부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EU 집행위는 2024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이었던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의 시행을 12개월 연기할 것을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제안하였음.²⁾
 - ※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은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산림의 전용·황폐화와 관련된 원자재 및 제품의 EU 역내시장 출시·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임.³⁾
 - EU 집행위는 무역 파트너십에 대한 우려, 명확한 기준 및 시스템의 부재 등을 이유로 언급하였으며, EU 이사회는 10월 16일 연장안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⁴⁾
 - 유럽의회는 11월에 연장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2035년부터 신차 및 승합차의 탄소배출량을 10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EU의 신차 CO₂ 배출성능 기준 강화 규정도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⁵⁾
 - 이 규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EU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독일 제조 기업을 비롯한 역내 자동차 기업이 해당 규정의 시행시점을 연기할 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음.
 - 블룸버그에 따르면, 동 규정이 시행될 경우 EU 내 자동차 제조기업은 약 200만 대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거나 130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됨.
 - 유럽의회에서 가장 큰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도 이 법안이 자동차 업계 일자리를 위협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
- 2027년부터 신설될 건물·도로교통 부문 연료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배출권 거래제인 ETSII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 특히 2027년에 EU 회원국의 약 절반이 선거를 치를 예정이어서 친환경 정책 반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1) BloombergNEF, 2024.10.18.

2) Fastmarkets, 2024.10.16.

3) KOTRA, 해외경제정보Dream, 2024.4.19.

4) Fastmarkets, 2024.10.16.

5) BloombergNEF, 2024.10.18.

-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 Krzysztof Bolesła는 EU가 ETSⅡ를 재논의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으며, 체코 총리 Petr Fiala는 자국 의회에서 ETSⅡ 시행시점을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슬로바키아 환경부 장관 Tomas Taraba는 EU 집행위에 ETSⅡ 법안을 재고할 것으로 추구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 간 연합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U 집행위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870억 유로(950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후기금 설립 계획을 가결하였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